

문화산책

백승현

대동문화재단 전문위원



2007년 8월 전남 광양 진월면 망덕에 있는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에 취재하러 갔다. 이 전형적인 어촌 가옥은 며칠 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돼, '문학의 향기'라는 연재를 맡고 있었던 잡지 기자에게는 좋은 글 소재였다.

여기서의 윤동주(1917~1945. 2. 16.)는 국민 애송시 '서시'를 쓴 민족시인. 정병욱(1922~1982)은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국문학자다. 정병욱 교수는 '한국고전 시가론', '한국의 판소리' 등을 집필한 고전문학 연구의 태두다.

1938년 서울 연희전문 문과에 입학한 윤동주와 1940년 입학한 경남 하동 출신의 정병욱은 선후배로 만나 우정을 나눈다. 함께 하숙 생활을 하고, 서로 시와 평론을 강평해 주는 문학 동지이자 '소울메이트'가 됐다.

1941년 12월 졸업을 기념해 윤동주는 그동안 써온 19편의 작품을 모아 자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77부 한정판으로 출간하려고 했다. 육필 원고를 받아 읽어본 영문학자 스승 이양하는 이 시들이 일제의 검열에 걸릴 것을 염려해 시집 발간을 미루자고 했다. 윤동주는 나머지 한 부는 자신이 보관하고, 마지막 한 부는 '문학도반'인 정병욱에게 맡겼다.

윤동주는 이후에도 더 많은 시를 썼는데, 특별히 '참회록'은 1942년 1월 24일 고국에서 쓴 마지막 작품이 되었다.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그러나 그 '즐거움 날'은 시인에게 다시 오지 않았다. 시인은 '그 한 줄'을 다시 쓰이지 못했다. 윤동주는 1942년 일본 릿쿄대학에 입학했고, 여름방학 때 마지막으로 용정의 고향에 다녀갔다. 1943년 10월에 경도 도지사 대학 영문학과에 입학했고, 1943년 다시 여름방학을 맞아 귀향길에 오르려다 독립운동 혐의로 일경에 체포됐다.

용정 고향집에 갑작스런 전보가 온 것은 1944년 2월 18일. '16일 동주 사망. 시체 가지러 오라'는 전갈이었다. 윤동주와 같이 수감되어 있던 고종 송몽규도 같은 운명으로 함께 감옥에 있다가 며칠 후인 3월 7일 숨을 거두었다. 송몽규는 "동주는 매일 일본 경찰로부터 이름 모를 주사를 맞았다"고 증언했다. 부친 윤영석은 시신을 인수해 3월 6일 고향 용정의 동산교회 묘지에 묻었다.

윤동주의 사망 소식이 울부짖던 이는 용정의 가족들만이 아니었다. 1944년 연희전문을 졸업한 정병욱은 학도병 징집 통지를 받게 됐다. 전쟁에 나가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보다 더 컸던 것은 바로 윤동주의 시고(詩稿)에 대한 걱정이었다.

정병욱의 부친 정남섭은 하동에서 교편생활을 하다가 1933년부터 광양 망덕에서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광양 망덕에 들른 정병욱은 어머니 박씨에게 윤동주 시집 원고를 맡겼다. "어머니 이 원고는 제 목숨보다 귀중한 원고예요. 저놈들에게 들리지 말고 잘 간직하세요. 제가 전 사해서 돌아오지 못하거들랑, 연희전문 교수님들에게 갖다 드리면 이 원고가 세상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일경 감시망을 피해 명주 보자기로 원고를 싸서 기름종이에 넣은 후 마루 밑 땅을 파고 작은 향이라 속에 숨겼다. 해방이 되어 살아 돌아온 정병욱과 어머니는 시고를 꺼내 들고는 함께 통독했다. 3권의 육필 시고 중에 이양하 교수, 윤동주 보관본은 행방이 묘연했다.

유일하게 남은 시고는 1948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으로 발간돼 비로소 윤동주 시인이 세상에 알려졌다.

다. 1955년 정병욱과 윤동주 시인의 조카 윤일주의 힘으로 서거 10주년 기념 시집이 발간돼 시인의 삶과 시는 완전히 부활했다. 2018년 친필 원고는 연세대학교 판손 홀의 윤동주 기념관에 소장됐고, 이 원고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광양 정병욱 가옥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정병욱은 나중에 윤동주가 일본으로 떠나기 전, 자신에게 자필 시집을 건넨던 순간의 눈빛을 잊지 못한다고 기록했다. 그 눈빛은 '민족의 슬픔을 한 몸에 짊어진 성자의 모습'으로 기억하며, 그가 남긴 원고를 '성우(聖鳥)'처럼 받들었다.

1934년 18살 때 '살과 죽음'이라는 시를 쓰기 시작한 이래 순수한 내면의 의지로 '부끄러움'을 담고 또 담으며 민족 정서의 '순수함'을 성찰한 시혼을 담은 우리말 시편들은 육필 원고로 우리 문학사 속에 온전히 살아남게 됐다. 1968년 정병욱의 헌신으로 연세대학교에 윤동주 시비가 세워졌고, 이후로 매년 학위 수여식과 캠퍼스 운동주 시비 주변은 졸업생들의 꽃다발로 동산을 이룬다고 한다.

최근 문화잡지사 기사는 광양 정병욱 가옥의 기억에 안고 백두산 기행을 했다. 간도 독립운동의 진실이었던 용두레 우물, 일송정, 명동학교, 윤동주 생가를 둘러보았다. 백두산-용정-연길-서울 연세대-전남 광양 정병욱 가옥까지 이어지는 시간 여행이었다. 척박한 황무지를 일구며 민족의 자존심을 지켰던 간도 조선족들의 강인한 생명력이 시인의 섬세한 감수성과 결합되어 한국 문학의 정점을 찍었고, 그 불멸의 문학혼이 한민족의 역사와도 이어지는 현장을 확인하는 문학 여행이었다.

'중국 조선족 유명시인 윤동주 생각'엔 바가 내리고 있었다. 분단 조국 한 춘추적 잡지사 기사는 그렇게 '서시' 비석과 윤동주의 조각상을 몰고다니 바라보았다. 지금 우리는 부끄러움조차 잊어버린 시대에 도대체 무얼 위해 살고 있는가? 광활한 만주 벌판 위 광활한 하늘 위로 눈으로만 참회록을 쓰고 있었다.

기고

최병용

전남도의원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누려왔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청소년과 일반인은 물론, 일상 공간과 온라인 환경까지 마약의 접근 경로가 빠르게 넓어지면서 우리 사회 전반이 마약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2025년 기준 마약류 단속 사범은 총 2만 3403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20~3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청소년 사범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으며, 외국인 마약사범은 329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마약류 압수량 또한 1156kg에 이르렀다. 2022년에는 20대 청년이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참극이 발생했다. 이는 마약이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 사례다. 이 외에도 마약으로 인해 발생한 참혹한 사건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문제는 '사후 약방문'식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이다. 마약 범죄의 재범률은 약 35% 내외로 일반 범죄보다 현저히 높다. 이는 마약이 단순한 범죄에 그치지

'마약 청정시대'는 옛말, 지역 맞춤형 방패 들 때

않고 '치료가 필요한 질병'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마약 문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예방-단속-처벌-치료-재활'이 함께 작동하는 종합적 대응체계가 갖춰져야만 근본적인 해결에 다가설 수 있다. 특히 중독의 길에 들어선 이들에게는 비난만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마약 문제가 다음 세대로 확산되지 않도록 청소년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에서는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온라인을 통한 유해 정보와 접근 경로를 차단하는 대응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촘촘히 갖추는 일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다.

중앙정부도 전담수사 확대와 예방교육 강화, 치료-재활 프로그램 보장 등 범부처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마약 문제는 중앙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결국 대응의 성패는 지역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예방과 관리가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지역에서 마약 문제에 대해 실천할 수 있는 몇가지 방안을 제안해 본다.

첫째,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단순한 경고성 교육을 넘어 실제 위험성과 중독의 폐해를 체감할 수 있

는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 보건소, 경찰, 관련 기관이 연계해 청소년시설 중심의 예방교육을 정례화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국어 교육과 상담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둘째,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인프라는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단속 처벌이 아닌 의료기관 연계 치료, 재활 프로그램, 사회복귀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 경찰, 보건기관 간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셋째, 주민 참여형 감시망과 신고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과 신고가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주민 참여를 이끌 실효적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마약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관이 아니라 책임 있는 실천이며, 무관심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이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와 행정, 의료와 복지 등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건강한 전남, 마약 없는 대한민국도 결국 지역의 예방과 공동체의 실천에서 시작된다.

취재수첩

광주를 달리는 200대 자율주행차

이승홍

경제부 부장



처음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말 없는 마차'를 두려워했다고 한다. 시속 30km만 넘어도 사람이 견디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자동차는 결국 도시를 바꿨고 산업을 바꿨다. 지금 도로 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다.

올 하반기부터 광주 도심에 자율주행차 200대가 투입된다. 골목길과 교차로, 지하차도와 고가도로를 스스

로 오가며 데이터를 쌓는다. 인공지능(AI)은 이를 학습하고, 차량은 더 똑똑해진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은 광주를 한국형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업은 규모부터 남다르다. 국비 610억원이 투입되고, 앞으로 3년간 광주 전역이 실증 무대가 된다. 특정 노선이나 산업단지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시험장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현대자동차와 자율주행 기업, 보험사, 정부기관까지 참여한 것도 이례적이다. 단순한 기술 실증을 넘어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미에 기입다.

광주시는 이미 국가 AI데이터센터로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을 구축해왔다. 여기에 미래차 산업까지 연결되면 제조업 도시에서 AI 모빌리티 도시로 산업 지형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공장이 도시의 상징이었다면, 앞으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오는 셈이다.

물론 기술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 도심에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넘친다. 갑자기 튀어드는 보행자, 복잡한 골목길, 공사 구간과 약전후까지 AI가 모두 판단해야 한다. 자율주행은 단순히 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안전 시스템과 연결된 문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차량 숫자보다 도시의 준비다. 도로 인프라와 통신망, 사고 대응 체계, 시민 신뢰까지 함께 갖춰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증 이후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다양한 미래산업 사업이 추진됐지만, 상당수가 실증 단계에 머무르거나 외부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산업과의 연결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사업 역시 단순히 '광주에서 시험했다'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 부품업체와 소프트웨어 기업, 스타트업, 대학 연구진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로 이어져야 한다.

사설

통합특별시 지원금 지급방식 법제화 절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핵심동력이 될 20조원 규모의 '통합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한 지역의 우려가 크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등 정부 핵심 부처가 총망라돼 꾸려진 '통합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가 내달 중순께 지급 방식을 최종 확정하는 데 아직 지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 전혀 모르고 있다.

통합 주제인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 논의 구조에서 배제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 예산'으로 올지, 아니면 정부가 사용처를 지정해주는 '국비 사업' 형태로 내려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통상 지방재정조정 및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와 특수 사정으로 발생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특별교부세'로 나뉜다.

정부가 향후 4년간 5조원씩 지원하는 20조원이 이런 기존 체계로 집행되면 통합특별시의 기존 재정수입액은 시·도로 분리됐던 때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그동안 지원됐던 다른 명목의 국비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국가 주도의 대형 인프라 사업이나 특정 목적의 국비로 내려오면 통합특별시는 정부 대신 사업을 수행할 뿐, 의사결정권은 사실상 없다.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에 맞춤형 예산 투입도 불가능하다. 즉, 지원금이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자율성 여부가 달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최근 정부가 외면한 통합특별시 행정통합 준비 예산 573억원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중속 추진 우려에도 광주-전남 시도민이 행정통합에 힘을 모은 것은 정부의 인센티브 약속 때문이었다는 준비과정에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데다 향후 사용처까지 정부 마음대로 한다면 통합 시너지 효과는 커녕 통합전보다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1=2가 아니라 1+1=1.8 등 2미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통합특별시가 중앙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지원금을 쓸 수 있게 기존 재정지원 틀이 아닌 지방교부세법 안에 '통합특별교부세' 조항 신설 등 정부의 법제화가 절실하다.

광산구 '탈 플라스틱' 정책 호평받는 이유

미국-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폭등으로 에너지와 플라스틱 등의 절감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요즘, 광주 광산구의 '탈 플라스틱'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다화용기 무료 대여 사업과 '광산다담컵' 등의 시책을 추진하며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제시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30% 감축을 목표로 플라스틱 산업 구조 전환을 꾀하고 있는데 스포츠 경기장, 커피숍, 구내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다화용기 사용 확대가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광산구는 지난 2023년부터 다화용기를 쉽게 빌리고 간편하게 반납할 수 있는 사용 체계를 구축해 왔다.

축제·행사 현장의 다화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와 협업체 소출동에 그릇, 접시, 수저, 컵 등 1만3000여개의 식기류가 비치된 광산구 다화용기 지원센터를 열어 운영한 것이다. 기관, 단체, 시민 등 누구나 축제, 행사에서 사용할 다화용기를 무상으로 빌릴 수 있어서 인지 호응도 좋았다.

첫해 45회였던 대여 실적은 2024년 97회, 2025년 160회로 크게 늘었고 이 기간 축제 등에서 사용된 다화용기는 13만 6120개나 됐다.

또 지난해부터는 광산 대표 축제인 '광산뮤직ON페스티벌'과 광주 속 지구촌 축제인 '광산 세계야시장'에 아예 다화용기 시스템까지 도입했다.

두 축제에서 사용된 다화용기는 각각 7만 7345개, 2만 7700개였다. 이는 10만 5000여개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 것이다.

2021년부터 구청 주변 커피숍들과 협업, 커피, 음료를 주문한 소비자에게 다화용 컵(광산다담컵)을 제공하는 '광산다담컵' 사업도 효과적이다.

회수된 다화용 컵에 대해 반납, 수거, 세척, 분배 등 재사용 체계까지 기동해 지금까지 13만 8775개의 다화용 컵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광산구가 쉽게 쓰고, 버리는 소비문화를 버리지 않고 다시 쓰는 선순환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셈이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40 경제부 370-7020 산업부 370-7010 사회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편집부 370-7082 사인부 370-705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광)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